



IMF태풍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성장률 하락 · 농업경영비 증가 · 농산물 소비구조 및 농업금융 변화 가능

국 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IMF의 태풍에 휩싸이고 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마저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환율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는등 금융시장이 정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없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달러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실물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다시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

적을 이뤄낸 우리민족과 한국경제의 저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재기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해선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도 IMF 경제체제하에서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는 거센 도전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UR협상당시 개방이나 보호나 하는 논쟁을 하던 때나 WTO체제하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논하던 때와는 다르다. 그래도 그때는 경제가 잘 나가고 성장의 과실을 농업에 나눠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발휘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가적 명제속에서 농업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하는 해답을 정부와 IMF간의 협약내용과 이 합의사항이 농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부문별로 분석함으로써 찾아 보고자 한다.

농업관련 예산

정부와 IMF는 98년 경제성장 목표를 3%, 물가상승율은 5%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요인 등을 감안할 때 물가 5%억제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불안해지면 그만큼 재정긴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IMF는 내년예산에서 국내총생산(98년 460조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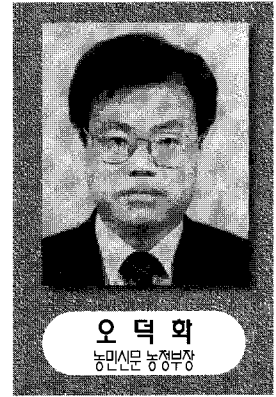
의 1.5%인 7조원정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 농업부문에 산을 줄일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 규모는 크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간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부지확보와 공사지연 등으로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는 사업, 그리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선심성으로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추가된 사업 등을 우선 감축대상으로 삼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예산의 감축으로 42조 구조개선사업의 마무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99년 착수예정인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된다.

농업경영비 증가

농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될 부분이 각종 영농자재 값의 인상이다.

외환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배합사료의 품귀는 농업부문 이라고 이번 경제위기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중의 하나다.

영농자재는 환율인상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폐지 또는 축소, 면세유 공급제도의 중단이나 감



오 덕 옥
농민신문 농정부장

축등의 악재를 안고 있다. 이중 환율인상은 모든 주요 영농자재에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주요 영농자재원료의 수입의존도는 비료 43%, 농약 65%, 배합사료 96%, 유류 100%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최악의 상황인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에서 1,600원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96년의 800원대에서 50%~10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율이 50%만 올라 1,200원에서 안정이 된다고 해도 업체는 비료의 경우 21.5%, 농약 32.5%, 배합사료 48%, 유류 50%라는 원자재 수입가격 인상요인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인상요인은 곧바로 제품가격에 전가될 것이다. 환율이 50% 오르는 경우 쌀의 경우 10a당 생산비 44

만2천4백42원중 비료·농약값 인
상만으로 2% (9,014원)의 생
산비 증가요인을 안게 된다는 분
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난방용 기름을 많이 쓰는
시설 채소나 시설 화훼농가의 경
우 당장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
을 수 없게됐다. 축성오이의 경
우 영농비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 방울 토마토는
36%, 장미는 32.3%에 달하고
있어 고유가 시대에 시설 하우스
농업이 어떤 형태로 구조조정을

겪을지 속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농업용 면세유공급마저
중단된다면 벌써부터 일부 나타
나고 있는 시설채소나 화훼농가
의 생산포기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높다.

여기에 지금 정부내에서 검토
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부가세 면
제조치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
우 엇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을 더
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배
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조
치 하나만 없어진다해도 농민의

사료비 추가부
담액은 연간 3
만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농기계의 경
우는 50마력이
상의 대형 트
랙터의 수입부
품 의존율은
50%, 4조식 산
물형 콤바인은
부품의 30%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
이다. 또 농가
선호도가 높은
대형 농기계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취약
점을 안고 있어 그동안 농기계반
값 공급등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영농기계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
이다.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사회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다시 시작하자는 근검·절
약분위기의 확산과 재정긴축, 저
성장정책, 임금인상 억제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위축
되고 농산물소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쌀 등 주식과 기초 농산물은 비
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
상되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육류
와 낙농제품, 신선 과채류등은
소비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각 가정이나 직장, 단체
등의 외식과 회식이 줄어들면서
육류와 상추 등 채소류의 소비감
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는 견해
가 많다.

농산물 수입

달러부족과 환율인상으로 농산
물 수입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 원
료나 밀,콩등 곡물류의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단기



시설하우스 등의 난방용 유류가격 인상 등 농업 경영비 증가로 인하여 농민들이 겪는 시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인 외화부족으로 이들 곡물류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료업체는 물론 대두 가공업체, 전분 제조업체등은 조업중단이나 단축 등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어서 이같은 현상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되던 오렌지 바나나 키위 포도 등 수입과실류와 치즈등 낙농제품 외국산 담배등은 환율인상폭만큼 수입가격이 오르게 돼 국내생산 농산물로 소비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통 상

우리경제가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모든 부문에서의 개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개방도 하나의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이나 자본시장과 달리 IMF가 직접적으로 농업부문에 개방을 요구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있을 각종 다자간 통상협상이나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개방확대를 요구해 올 경

우 이를 지켜내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외국 농산물 수입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영무역제도와 수입권 공매제도의 철폐, 수입자유화 시기의 조정 및 관세인하 등이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2001년 개방예정인 쇠고기와 2004년까지 수입개방이 유예된 쌀시장의 조기개방을 미국등이 요구해올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철폐

농업부문에 외국자본의 진출은 농약업계나 종묘업계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이 크고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자본이 국내 판매망을 갖춘 유력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본참여 확대등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묘업이나 과일 채소 도매업 도축업과 축산물 도매업등이 우선 공략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는 분석이 유력하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중 농업자재관련 품목은 콤팩트와 양수기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2조 3조식 중소형 콤팩트인은 일본이 개발한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국산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4조식 대형 콤팩트인은 국산화율이 낮고 대부분의 기술을 일본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일본업체가 기술제휴를 청산하고 부품공급을 중단하면서 국내에 직접 진출할 경우 국내 조립생산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농업금융

IMF와의 협약내용중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자 손실은 정부예산에서 부담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농업금융부문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가 저성장정책 기조 속에 긴축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농업금융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정책자금의 축소와 지원금리 인상을 등을 예상할 수 있어 농가의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약정보**